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참조26)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김윤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21
----------	------

발의연월일: 2024년 2월 일

발의자: 김윤환, 성해런, 고병용, 조우현,
최현백, 서은경, 최종성, 이준배,
강상태, 이군수, 정연화, 박기범,
박경희, 김선임, 윤혜선, 조정식
(이상 16명)

1. 제안이유

-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열린 ‘헬러원’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성남시민 7명을 포함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천신만고 끝에 2024년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실상 폐기 되었음.
- 이에 특검을 추진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등을 하여 한치의 의심과 의혹을 남기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성남시민 7명을 포함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2024년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동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음.

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결의문(안): 별도 붙임

4. 기타사항

- 이송기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 붙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1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이태원 참사 특검 추진을 전 성남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29일 10시 15분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열린 ‘할러윈’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성남시민 7명을 포함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로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9일, 천신만고 끝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폐기수순을 밟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차가운 거리에서 그날의 진실 확인만을 외쳤던 유가족과 지금도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자,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알고자 했던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보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과잉 입법’, ‘특조위에 과도한 권한’,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의 어려움’, ‘예산 문제’ 등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 논리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았던 논리와 동일한 것으로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모두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희생된 참사인데 여전히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과연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불가하다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특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검사’를 즉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 국회, 지자체는 주최자 없이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2024. . .

성 남 시 의 회